



주간 통일정세

2012-4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軍부대 찾은 김정은 "군시설, 승마장으로 바꾸라"(종합2보)(11/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직속 기마중대 훈련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9일 보도함.
-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김경희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총참모장, 김기남 당비서, 김격식(상장), 김양건·김평해·문경덕 비서, 박봉주 당경공업부장, 한광상 당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김경옥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룡하 당부부장, 황병서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김병호 당부부장, 최부일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손철주(상장),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선동담당 부국장, 박정천(중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전창복(상장) 등이 동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함.
-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기마중대 훈련장을 찾아 여러 훈련 시설과 군인들의 기마훈련을 지켜보았으며 이번 군부대 시찰 배경에 대해 그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만들 것을 구상하고 해당부문에 과업을 줬다며 실태 파악을 하려고 나왔다고 말함.

● 北 김정은 여동생 공개활동 주목...군부대 오빠 동행(11/19,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공개 활동에 나섰다
- 김여정의 모습은 조선중앙TV가 19일 김 제1위원장의 제534군부대 직속 기마중대 훈련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방영한 관련 사진에서 확인됨.

● 北 전방위 충성도 검증.. 최부일도 강등(종합)(11/20,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당·정·군 전방위에 걸쳐서 충성도 등에 대한 인물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지난 4월 후계를 공식 승계한 이후 '당→정→군' 순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충성도와 비리 등에 대한 검증(검열)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힘.
- 당국자는 "검증 작업은 평양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지방단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일부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은 직위는 그대로 두고 계급을 내린다든가 인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함.



- 또한, "이 같은 인물 교체를 대규모 숙청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리더십 교체에 따라 김정은의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불순 적대분자 색출해 짓밟개버려야"(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23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축하문이 회의에 전달됐다고 24일 보도함.
-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1999년 9월30일과 10월1일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며, 이번 회의에는 김기남 당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문경덕 당비서,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태중수 함경남도 당책임비서를 비롯한 각 도 당책임비서, 인민보안기관 일꾼 등이 참석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인민내무군 안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확고히 세우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즉시 접수, 즉시 대책, 즉시 집행, 즉시 보고하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인민보안사상은 내무군 건설과 활동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불멸의 기치"라고 강조하며 "내무군은 노동당 깃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틀어쥐고 당의 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실해야 하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충구를 내대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함.
- 그는 또 "소요·동란을 일으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는 불순 적대분자,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가차없이 짓밟개 버려야 한다"며 "(분주소장들은) 관내 군수공장을 비롯한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인민봉사 부문과 중요대상 건설에 대한 보안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김 제1위원장은 "인민보안원은 법을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며 제 살 궁리만 하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분주소장과 인민보안원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함으로써 참된 인민의 보안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리영호 前총참모장 '반당·반혁명분자' 규정(11/25, 마이니치신문)**

- 북한 노동당이 지난 7월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반당(反黨)·반혁명분자'로 규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北中 무역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 노동당이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지난 10월 중순 '반당·반혁명분자'로 결정한 사실을 중견 간부들에게 알렸다고 전함.
- 신문은 또 노동당은 지난 10월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리영호가 군 내에서 파벌을 만드는 '군벌주의'에 빠졌고, 부인이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 등으로 해임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평양과 15개 주요도시, 100개 중소도시 등이 통화권이라고 설명함.

- **北, 평양시 하천정비·공원 리모델링 완료(11/20, 노동신문)**

 - 북한당국이 지난달 초부터 추진해온 평양시내 하천정비 사업과 공원리 모델링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평양시내 합장강·보통강 정리사업,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40여 일 만에 모두 마무리됨. 합장강 정리사업에서는 28만㎡의 진흙을 파내고 1만8천㎡의 옹벽을 보수했고, 보통강 정리사업에서는 80만㎡의 진흙을 파내고 3만2천㎡의 옹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지 9만㎡에 대한 정리·녹화사업도 진행함.
 - 또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인민 사랑을 활짝 꽃피워가려는 군인들의 투쟁으로 공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돼갔다"며 "밤낮없는 전투를 벌여 최상급의 공원을 건설했다"고 밝힘.

- **북한 전역서 체육환경 개선 사업 활발(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에서 체육시설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통신은 22일 "체육강국 건설을 위한 열풍 속에 각지에서 체육시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 확장되고 있다"며 평양과 각 지방의 성과를 소개하며 "평양에 인민 야외빙상장과 통일거리운동센터, 양각도체육촌이 운영되고 월미도체육단에는 인조잔디를 깔 축구경기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전함.

- **北 적십자대회 개최...향후 4년간 발전전략 설정(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2016년까지 달성할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북한 적십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적십자대회를 열고 2016년까지 조직 능력을 강화해 봉사의 질과 양을 개선·확대하고, 안전하고 활력있는 지역건설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힘.
 - 적십자회는 이어 ▲재난 대비 사전준비 및 긴급 대응능력 향상 ▲질병 예방, 구급처치 기술 보급 및 보건 선전·교육 강화 ▲적십자 운동의 근본원칙과 인도주의 정신 확산 ▲이산가족의 고통 경감 및 해외동포의 인권과 존엄, 권리 옹호 등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함.

- **EU "北 올해 식량 사정 작년보다 좋아져"(1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유럽연합(EU)의 식량조사단은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작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의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량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말하며, "북한의 식량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추가로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2. 대외관계

가. 일반

- **중기업, 北나선특구 투자 가속화(11/20, 신정보(新京報))**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나선 특구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중국 신정보(新京報)가 20일 밝힘.
 - 신문은 지린(吉林)성 경제합작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나선 특구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8~10개사에 이른다고 전함.
 - 또한, 지난 8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북·중이 6개 기업의 투자사업과 4개 정부합작사업에 정식 합의했으며 중국 교통그룹, 중국철로건설그룹, 자오상(招商)그룹, 아타이(亞泰)그룹 등 대형 기업들이 곧 나선 특구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EU, 1년 반 새 北에 1천만유로 지원(1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이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1천만 유로(약 138억 원)에 달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데이비드 샤록 EU 인도지원사무국(ECHO) 대변인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850만 유로, 영국의 민간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150만 유로를 각각 북한에 지원했다고 설명함.
 - 또한, 샤록 대변인은 지난 2010년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에 20만 유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30여 개의 대북지원 사업에 총 1억2천440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 **北,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향적 자세(11/22,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일본 측이 제기한 납북 피해자 합동조사위원회의 설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국장급 회담을 이달 내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들어갔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10월 하순부터 이달에 걸쳐 일본 정부의 핵심부와 가까운 관계자가 외국에서 북한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총리 관저의 의향'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北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한 무인기 개발계획' 발표 관련 '패망 후 수십 년간 재침의 제도적·법률적·물적완비 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이 군사작전적 실행단계로 이행하려 한다'고 비난(11.19, 중통/재침의 날개를 퍼려는 군국주의 일본)
- 北 최고인민회의 의장(최태복)과 몽골 국가대회 의장(즈.엔흐볼드) 사이 회담, 11.19 국가대회의 청사에서 진행(11.20, 중통)
 - △北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11.19 몽골 대통령 의례방문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11.19 최태복 의장 편에 '김정은 선물' 전달(11.20, 중통)
- 北 대표, 11.15 유엔 총회 제67차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北 우주개발기관 확대 강화·실용위성들 계속발사'를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과 비선택성 보장,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不許' 등 주장(11.22, 중통)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11.2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건을 위한 권리 보장할 것' 강조(11.23, 중통)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연평도 승전 주장은 또 다른 도발" 주장(11/21, 노동신문)
 - 북한은 21일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남북 포격전을 내부적으로 '승전(勝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생억지로 또 하나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라고 비난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개인필명 글에서 연평도 포격전 '승전규정'은 "쓰디쓴 참패의 진상을 오도해 수치를 모면하고 체면을 세워보려는 가소로운 추태"라며 "북남 대결소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반공화국도발소동"이라고 전함.
 - 또한, 이달 23일을 전후해 남한에서 정부 주최로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추모행사가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비난함.
- 北 "南승전행사,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질 것"(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1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아 각종 추모행사를 벌일 계획에 대해 '제2의 연평도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



서 "우리 군대가 있는 한 괴뢰들의 거짓으로 포장된 '연평도 승전' 기념식 추태는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괴뢰들이 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의 드팀 없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함.

- 또한 대변인은 "승전 나발을 불어대며 그 무슨 기념식 따위 놀음을 벌여 놓을수록 그것은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의 보복의지만을 백배해줄 뿐"이라고 강조함.

● 北 "연평도 포격은 자랑스러운 승전" 주장(11/23, 노동신문)

- 북한은 23일 2주기를 맞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승전' '정의의 승리'이며 도발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함.
- 북한의 '군사논평원'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해괴한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평도 포격전은 신성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며 "그것은 또한 분별을 모르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에게 패전의 쓴맛을 안겨주고 용감무쌍한 백두산 혁명장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시위한 자랑찬 승전"이라고 주장함.
- 논평원은 우리 군 당국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본거지로 북한을 위협하는 포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도발광기에 들뜬 괴뢰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사전통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신성한 우리 영해에 함부로 불질을 해대기 시작했다"고 남측을 비난했으며, "현실적으로 연평도 불바다를 펼친 우리 서남전선 장병들 속에서는 단 한명의 희생도, 단 한명의 부상자도 없었다"며 "있었다면 들판에 매놓은 한마리 황소의 뒷다리에 눈먼 포탄 한개가 박혔을 뿐"이라고 우리 군(軍)의 대응 포격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함.
- 논평원은 이어 "괴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서남전선군 장병들을 포함한 우리 천만군민의 드팀 없는 의지"라며 "괴뢰들의 도발책동이 우심해질수록(더욱 심해질수록) 두 해 전의 연평도 불바다가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남외국인 금강산관광 중단 요구는 주권침해"(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2일 우리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관광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금강산 국제관광에 대해 삿대질하는 것은 금강산이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고 폰수 없이 놀아대는 가소롭기 짝이 없는 짓"이라며 이같이 밝힘.



나라 실천행동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전환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에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또 북한 입장을 대변해주는 재일본조선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재선된 오바마가 맞이할 결단의 국면' 제목의 '시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미(북미) 대화의 역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조선신보는 과거 북미 간에 채택된 '북미 공동 코뮌니케'의 의미를 거론함. '북미 공동 코뮌니케'는 지난 2000년 10월 당시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문서임. 북한의 의중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고위급 사절의 상호 방문 등을 통한 '통 크고 과감한 직접협상'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외교가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내년 초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 게다가 북한이 2년 전 공개한 우리농축시설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미국임. 결국 북한의 복합적인 메시지 공세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선택'을 강요하는 화답을 한 셈임. 이렇게 보면 북미 양측이 서로에게 할 말은 한 상황임. 특히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이 모처럼 제안한 내용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향후 국면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조만간 뉴욕채널이나 공식 매체 등을 통해 보여줄 제2의 메시지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북한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올 경우 조만간 6자회담 수석(또는 차석) 대표급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음. 물론 이는 본격적인 고위급 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전 수준이 될 공산이 큼. 또 북한과 미국의 주장에는 쉽게 접점을 찾기 힘든 간극이 여전함.
 -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9일 미국을 방문해 클리퍼드 하트 국무부 대북특사, 제임스 줌월트 국무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공조방안을 집중 조율함.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19일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됐지만 한미 양국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함.
- <미얀마 핵개발과 북한 연계 의혹, 말끔히 걷혔나>(11/2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안보 분야의 투명성도 제고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함.
 - 미얀마와 관련된 대표적인 안보 분야 의문은 핵무기 개발 의혹, 특히



핵개발 과정에서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었는지 여부임. 21일 안보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은 은퇴한 미얀마 최고지도자 탄 슈웨 장군은 2005년 핵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 미얀마는 또 2006년을 전후해 독일과 스위스, 싱가포르로부터 우리늄 농축에 쓰일 수 있는 정밀기계들을 수입했음.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미얀마에서 사들인 장비들이 핵개발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의혹을 일으킬 수는 있다는 의견을 보였음. 미얀마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투라 슈웨 만 의회 의장이 200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함께 사진을 촬영했던 전병호 당시 노동당 비서는 북한에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강행할 때 핵심 역할을 했음.

- 하지만 미얀마와 북한 사이의 군사 교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소형 무기와 미사일 정도에 국한됐다는 입장임. 물론 이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임. 2009년과 2011년 미국은 군사 장비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됐던 북한 선박을 추적, 회항시킨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얀마 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함.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에 도착하기 전날인 지난 18일 미얀마는 비밀 핵시설로 의심받아 온 장소에 대해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IAEA의 핵안전협정 추가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핵개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음.
-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해 의회에 보낸다 해도 50여 년 간 독재를 유지해온 군부가 여전히 의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비준 등의 절차가 과연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임. 로버트 켈리 전 IAEA 사찰관은 미얀마가 핵개발 문제에 대해 "뭘 갖고 있는지 공개적인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말함. 미 의회에서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북한과 미얀마와의 관계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핵개발 관련)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日, 미얀마행 北 미사일 자재 압수"(11/24, 연합뉴스)

- 일본이 미얀마로 향하는 선박 안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북한제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지난 8월말 도쿄 항에서 대만 해운 회사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 'WAN HAI 313'(2만7천800t)호에서 'DPRK'(북한)라고 새겨진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함.
- 압수된 물건은 알루미늄 합금 막대기 15개와 길이 5cm, 지름 9cm의 금속관 50개 등임. 일부는 우리늄 핵무기 제조용 원심분리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이었음. 이를 거래하는 것은 북한제



대량파괴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함.

- 한미일 당국은 미얀마가 핵무기 개발은 포기했고,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알루미늄 합금을 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음. 대만 해운회사는 7월27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WAN HAI 215'호에 일단 화물을 실었다가 8월9일 중국 서커우(蛇口)에서 'WAN HAI 313'호에 옮겨 실었음. 애초 8월14일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화물선에 옮겨 실은 뒤 8월15일 미얀마 양곤항으로 가져갈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로 화물을 실은 채 뱃머리를 돌렸고 8월22일 도쿄항에 입항함. 도쿄세관과 경제산업성 등은 자국 특별조치법을 처음 적용해 화물 검사에 나섰음. 관련 서류나 선원의 증언으로부터는 북한이 다롄에서 화물을 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알루미늄 막대기에 새겨진 'DPRK'라는 글자를 보고 북한제라고 판단함.
- 수출사는 '다롄합흥국제공사(大連合興國際公司)임. 이 회사는 아사히신문에 "다른 회사의 부탁을 받고 수출했다"며 "압수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유는 모른다"고 말함. 미얀마에 알루미늄 합금 등을 수출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함. 수입사는 미얀마 건설회사인 'Soe Ming Htike'임. 미국은 이 회사가 미얀마군의 군사물자를 사들이는 위장 회사라고 보고 있음.
- 북한이 알루미늄 합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군과 관련된 물자를 손에 넣은 뒤 미얀마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됨. 중국과 미얀마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사실을 부인해 왔음.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5월에도 시리아에 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했음.

나. 미·북 관계

● <北 "대화가 중요해"...美 오바마에 기대감?>(11/19, 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협상'을 강조하는 글을 실어 시선을 끌고 있음.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바마 2기'를 맞은 미국에 일종의 '화해제스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9일 '조선반도 평화보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글에서 "조미(북미) 사이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시급히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함.
- 이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는 불신감이 사라질 수 없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조미 사이에 신뢰조성이 이뤄질 수 있고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임.
- 신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향으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며 대화·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신문은 또 자신들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이



유에 대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떠밀어나가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조선반도 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못박았음. 북한이 이처럼 미국에 대해 대화·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나온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벌써 두 번째임.

- 노동신문은 지난 12일에도 '모든 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달려있다'란 개인필명 논설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적대시 정책'이 "핵실험을 낳았다"며 정책 전환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메시지의 전반적인 강조점이 이번처럼 비난보다는 대화와 협상 쪽에 찍혀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음.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대해 대북 강경책보다는 포용책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이정철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색깔이 뉘지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요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보일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노동신문 "오바마 대북정책, 부시와 똑같았다"(11/21,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결산하는 시리즈 글을 게재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 때와 똑같았다"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21일 '파탄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 강경정책(2)'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각종 한미군사훈련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을 거론하며 2010년의 미 행정부는 "대조선 강경정책을 더욱 교활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함. 또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망발'이라고 반발하며 "대조선 강경정책 실현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지난 18일에도 2009년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결산한 시리즈 제1편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오바마 집권 1년간의 대북정책 동향은 우리에게 대한 고립압살 책동에 광분했던 부시 행정부와 같고 같았다(매우 똑같았다)"고 비난함. 이 시리즈는 앞서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했던 노동신문의 글들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어 북한이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개인필명 논설에서 미국이 정책 전환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19일에도 "대화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향으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며 대화·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2011, 2012년 대북정책을 결산하는 시리즈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임.

다. 중·북 관계

● 中기업, 北나선특구 투자 가속화(11/20,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나선 특구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20일 지린(吉林)성 경제합작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나선 특구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이 8~10개사에 이른다고 전함. 신문은 지난 8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북·중이 6개 기업의 투자사업과 4개 정부합작사업에 정식 합의했으며 중국교통그룹, 중국철로건설그룹, 자오상(招商)그룹, 아타이(亞泰)그룹 등 대형 기업들이 곧 나선 특구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건축재료, 부동산,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상하이 증시 상장기업인 아타이그룹은 나선 특구에 시멘트 가공생산라인 등을 갖출 계획이며 아시아 최대 국영 곡물기업인 베이다황(北大荒)그룹은 500ha 규모의 벼 재배 실험을 진행할 예정임. 두만강 유역 대북 교역 창구인 훈춘(琿春)시의 공상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국유기업들이 나선 특구에 입주하면 다른 중국 입주기업에 '보호우산'을 펼쳐줄 것이고, 북한에서의 투자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함. 신문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대기업들이 같은 투자 움직임에도 중국 기업인들은 여전히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노무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 훈춘시의 한 기업인은 "대형 기업이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회계사무소, 세무국이 있어야 하고 경제 분쟁 발생 시 법률사무소, 법원 등이 필요한 데 북한에는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야 걸음마를 땀다"고 말함.
- 앞서 훈춘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투자 연구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분쟁 접수·처리 기구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음. 보고서는 "북한에 지금이나 설비를 투자한 뒤에도 북측이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를 방문조차 할 수 없게 돼 투자가 모두 '북한 주머니 속의 물건'이 된다고 지적함. 중국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북·중이 공동 설립한 나선 특구 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을 지에 주목하고 있음.
- 신문은 중국 측이 지난 9월 나선 특구 관리위원회의 북측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린성 창춘(長春)시의 법률사무소를 견학하도록 하고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함.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김강일 원장은 "이전에 없던 나선 특구 공동관리위원회와 같은 북·중 공동관리기구가 생긴 것은 북한이 경제 특구를 단독으



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중국의 경험과 자금,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공동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北송일호 "북일 회담서 이전보다 많은 문제 논의"(11/19, 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는 최근 열린 북한과 일본 간 국장급 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다뤘다"고 밝힘.
- 송 대사는 회담이 열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가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일본인 유골 문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도 상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신문이 전함. 송 대사는 "일본이 특정한 문제만 고집하거나 우리(북한)가 접수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일본 측도 저들의 관심사항을 논의과정에 반영했다"고 말해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했음을 시사함.
- 그는 '과거청산 문제', '재일 조선인 지위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됐으며 "일본 측에서도 이 문제(재일 조선인 지위 문제)가 과거 역사에 기인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과 조일(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함.
- 지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북일 평양선언에는 "쌍방은 재일 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해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돼 있음.
- 송 대사는 회담 분위기와 관련해 "일본 측이 종래보다 협조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며 "그들(일본)도 쌍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데 관심을 둔 것 같다"고 소개함.
- 송 대사는 지난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회담했고, 후속 회담을 조기에 열기로 합의함. 북한과 일본은 2008년 8월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가 무기한 연기했으며, 4년 만인 지난 8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과장급 회담을 열고 '가까운 시일에 고위급 회담을 열어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었음.

● 다음 번 일·북 협의시 납치 피해자 재조사 논의될 것인가(11/22, 산케이신문)

- 일·북 양국 정부가 다음 번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 월내에 개최할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시킬 방침인 것이 21일,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로 확인됨.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를 포함한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고 알려짐.
- 15, 16 양일에 몽골·울란바토르에서 행해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이후



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시킴. 북한의 나오는 태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납치 피해자의 가족회는 21일, 도쿄도 치요다구의 내각부에서, 외무성의 스키야마 신스케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면회하며, 15, 16 양일의 국장급 협의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음. 이 자리에서도 북한 측이 다음 번 협의를 빠른 시기에 열고 싶은 생각을 나타냈다고 가족들에게 설명되었다고 함. 면회 후, 요코타 메구미씨(납치 당시 13세)의 어머니는 "북한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함.

마. 기 타

● 북한이 2년 전 공격했던 남한의 최전방의 섬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11/22, 워싱턴포스트)

- 북한은 남한이 2년 전의 연평도 사건을 죽음과 바꾼 영웅적 사건이라고 칭하자 이에 반발하며 섬을 다시 공격하겠다고 위협함.
- 북한은 2010년 11월 최전방의 섬을 공격하며 두 명의 해군과 2명의 민간인을 사망케 하였음. 남한은 이에 대응하여 포격을 하였지만, 평양은 어떤 군사적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말함.
- 남측 해군은 연평도에 해군을 죽음을 기릴 "기념관"을 2주년을 기념하여 세우겠다고 발표하였음. 북측의 남서전방 부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남측의 행동이 전쟁을 도발하며 "제2차 연평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성김 美대사 "한미 양국 미래 낙관"(11/20, 연합뉴스)

- 한미협회는 20일 저녁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회 한미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함. 행사에는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 성 김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GS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등 양국 정·재계 인사와 주한미군 장병 등 500여명이 참석했음. 한미협회 회장인 한승주 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국의 방위와 안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굳건한 한미동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 성 김 대사는 축사에서 "북한에서도 흥미로운 일련의 전개가 있었고 미국과 한국도 선거를 한다"면서 "올해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역동적인 한해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양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힘.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우정과 이해는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한미 양국의 장병은 한국의 국민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미협회는 이날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현홍주 전 주미대사에게 '한미 우호상'을 수여함. 한미 양국의 우호친선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1963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한미협회는 2002년부터 매년 한미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美 "누가 대통령돼도 새 대북정책 韓과 긴밀공조"(11/21, 연합뉴스)

- 미국은 내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오바마 2기 대북 정책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을 방문중인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클리퍼드 하트 국무부 대북특사와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내년 초부터 대북 정책 협의를 본격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함.
- 이 소식통은 향후 미국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놓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게 미국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함.
- 한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이기도 한 이 단장은 20일 오전 제임스 줘월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 외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미얀마에서 북한을 향해 '선택의 메시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 향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나. 한·중 관계

● 韓中 정상 "日 우경화, 주변국 불안"(종합2보)(11/19,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9일 한-일, 중-일 간 외교분쟁과 관련, 일본의 우경화가 주변국들에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함.
-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날 프놈펜 숙소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일본과의 외교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최규삼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함. 원 총리는 ASEAN 정상회의에서 영토·영해 문제의 경우 회의 의제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영토·영해 분쟁은) 일



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호적·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주변국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힘. 특히 ASEAN+3 정상회의 기간에 통상적으로 열렸던 별도의 한-중-일, 중-일 회담은 중국 측의 반대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를 두고 일본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우경화하면서 중국과 다투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토분쟁을 벌이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두 정상은 또 북한이 개혁·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이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에 대해 침략 의지가 없다"면서 "한국도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북한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원 총리도 동의함. 원 총리는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함.
- 두 정상은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과 관련해 2015년까지 양국 간 무역액 3천억 달러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연간 640만 명 이상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함. 한-중-일 3국은 20일 장관급 회담을 열어 3국 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임.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역설함.
- 두 정상은 이어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5년간 한-중 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긍정 평가하고, 양국 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을 확대해나가기로 함. 이밖에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 대화 출범 등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향후 새 리더십 하에서도 상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함.

● 시진핑 체제 출범후 中고위대표단 첫 방한(11/20, 연합뉴스)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체제가 출범한 직후 처음으로 한국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함.
- 중국 공산당 간부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천바오성(陳寶生) 부교장(부총장·차관급)이 이끄는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은 20일 오전 서울에 도착, 2박3일간의 일정을 시작함. 방한 대표단은 천 부교장과 한바오장(韓保江)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 자오빙빙(趙冰冰) 공산당 대외연락부 연구실 부주임 등 중앙당교와 대외연락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음.
- 대표단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나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결과와 새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함. 대표단은 이날 오후 김종훈 새누리당 국제위원



장과 만나고 21일에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 김병국 국립외교원장, 박병석 국회 부의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전함.

- 중앙당교는 공산당 엘리트와 간부를 육성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시진핑 신임 총서기가 국가부주석에 임명된 후인 2007년 말부터 교장을 맡아 왔음. 1956년생인 천 부교장은 고향인 간쑤(甘肅)성에서 당 위원회 상무위원과 란저우(蘭州)시 당서기로 활동하다가 2008년 6월부터 중앙당교 부교장과 비서장(사무총장)을 겸직하며 시진핑 교장을 보좌해 왔음. 2007년 제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앙후보위원 160여명 안에 포함된 그는 이번 18차 당 대회에서는 중앙위원(205명)에 선출됐음.

● **원자바오 총리, 이명박 대통령 회견...양국협력 중요해(11/20, 인민일보)**

-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회견함.
- 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 수교 20년 간 양국 관계는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는 물론 상호이익 배려와 상호 윈윈을 바탕으로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음.
- 원 총리는 또한 "현재 세계와 지역 모두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과 양국 경제성장 유지는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계속해서 중시하고 한국의 고위층 교류를 통해 신뢰 증진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협력을 전개해 나가길 원한다. 양측은 양자 간 FTA 협상 추진을 가속화하여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고, 기업들에게 공정, 개방, 투명한 환경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양국의 무역액이 2015년 3천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힘.
-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상호신뢰,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어려움에 대처하여 양국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수호하였다. 현 글로벌경제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중국 경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측은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 간 FTA 건설을 추진하고 양국 간 무역규모를 확대해 무역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지역 협력을 추진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함.
-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18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은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노력하여 양국의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함.

● **한-중, 26일 베이징서 제5차 고위급 전략대화(11/2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5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음.



- 이번 전략대회에서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과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게 됨. 한·중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함. 한·중간 고위급 전략대회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08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번 개최됐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회는 중국의 신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안 차관은 방중 기간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대외연락부 고위 인사 면담, 외교학원에서의 강연, 국제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짐.

다. 한·일 관계

● 남원지역 일본 여성들 위안부문제 사과(11/19, 연합뉴스)

- 전북 남원에 사는 일본 여성들이 위안부 문제를 사죄함. '한일 역사를 극복하고 우호를 추진하는 모임'은 남원지역 여성회원 50명이 지난 18일 남원교육문화회관 앞 항일운동기념탑에서 위안부문제를 사과하는 사죄문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힘. 단체는 사죄문에서 "한국에 와서 알게 된 내용 중 제일 큰 충격은 위안부문제였다"며 "순결을 빼앗고, 가족과 고향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았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힘.
- 이 단체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인 죄를 씻어내자는 취지로 국내에 사는 일본인 여성들이 지난 5월 결성함. 행사를 진행한 고쓰보노리꼬(50)씨는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진정한 신뢰와 우호의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사할린 징용 피해자, '대일외교 안일' 현소 제기(11/20, 연합뉴스)

-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 임금을 일본에 뺏긴 채 받지 못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함.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회와 경수근 변호사는 20일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 3천500명 중 70%인 약 2천500명임. 향후 이회팔 사할린 귀환 제일 한인회장 등 일본 거주자들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경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처럼 사할린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함.

- 헌법소원을 내는 이들은 1940년대 일제 점령 하에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일당 등을 대부분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뺏긴 채 돌려받지 못한 이들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음.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한일협정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우편 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정부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한일협정과 상관없이 남아 있다는 입장임.
-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피해자의 배상청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한·일 서울서 경제협력 방안 논의한다(11/21,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경제·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일 고위경제협력회의가 22일 서울에서 열림.
- 우리 측은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물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청, 주일한국대사관 관계관이, 일본 측은 츠루오카 코지(鶴岡 公二)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비롯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주한일본대사관 대표들이 참석함. 이번 회의에선 양국간 무역·투자·산업·에너지·환경·관광 등의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 타케시마 봉우리이름 검토, 한국이 비난 "주권의 침해다"(11/23, 산케이신문)

- 한국의 외교 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일본 정부가 타케시마의 주요봉우리의 일본어 지명을 국토 지리원의 지도에 기재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토 주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함.
- 당국자는 "사실이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함.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일본 측에 항의해 철화를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함.

● "한국 대륙붕 오키나와해구까지 이어졌다"(11/25, 연합뉴스)

-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음. 이제 정부가 날짜를 택해 이 문서를 유엔에 내는 일만 남게 됨.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내에는 우리 입장이 담긴 정식 문서가 제출될 예정임. 25일 북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2일 차관회의에 대륙붕 경계에 대한 정식 문서 제출 방침을 보고함. 외교부는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도 이런 방침을 보고할 계획임. 국무회의 보고는 27일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대륙붕 건은 의무적



으로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는 시안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 국무회의에 보고기로 했다"고 밝힘.

- 정부가 차관회의에 보고한 대륙붕 경계 정식 문서는 2009년 5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는 당시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우리측 대륙붕으로 규정했음. 이 면적은 총 1만9천km²에 달함.
- 정부는 정식 문서 제출을 위해 그동안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했음. 특히 2009년 같은 날 예비문서를 제출한 중국과는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데는 입장이 같음. 다만 한중간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짐. 애초 이달 초·중순께로 관측됐던 정부의 정식문서 제출이 다소 늦어진 것도 한중간의 이견 협의 때문으로 분석됨. 정부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협의도 완료된 것으로 보임.
-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아직 CLCS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CLCS의 권고를 기초로 확정된 대륙붕 경계는 최종적이지만 특정 주장에 반대가 있을 때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CLCS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를 원하는 회의 3개월 전에 문서를 제출하게 돼 있음. 정부가 금명간 문서를 제출하면 내년에 이 사실이 CLCS에 보고됨.

라. 미·중 관계

● 中 자칭린 퇴임 앞두고 訪美(11/20, 연합뉴스)

- 자칭린(賈慶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퇴임을 4개월 앞두고 조만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홍콩의 중문뉴스사이트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19일 보도함. 내년 3월 정협 회의에서 퇴임하는 자칭린 주석은 미국 방문 기간 미 행정부 관리들과 상원의원들을 만나 양국 관계를 논의한다고 명경은 전함.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그러나 자 주석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명경은 덧붙임.
- 자 주석은 지난 2002년 16차 당대회때 부터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아왔으나 최근 끝난 18차 당대회를 통해 당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은퇴를 함. 자 주석은 통일전선 분야와 민족·종교 문제를 관장해왔고 중앙대만업무영도소조 부조장으로 대만 통일 문제에 관여해왔음.



- **中, 9월달 미국 국채 보유 3억 달러 증가해(11/20, 인민일보)**
 - 미국 재정부가 16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달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3억 달러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미 재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9월에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1555억 달러로 전달 수정 후 데이터인 1조 1552억 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 미·일 관계

- **주일미군 풍기문란 사건 잇달아(11/23, 연합뉴스)**
 - 주일미군의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일본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된 가운데 미군의 풍기문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 소속의 오스카 헤이즈 위글 3세(23) 상병을 외설 혐의로 체포했음. 경찰에 따르면 위글 3세 상병은 이날 오전 3시15분께 요코하마시의 한 만화카페(PC방과 만화방을 합친 형태)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걸어 다니다가 가게 바닥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음.
 - 오키나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후텐마 비행장 소속 미 해병대 루이스 페르난데스(27) 병장이 체포됨. 페르난데스 병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오키나와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음.
 - 후텐마 비행장 소속의 다른 병사 1명은 탈영함. 탈영병의 성별이나 연령, 계급 등은 확인되지 않았음.
 - 지난달 16일에는 미 해군 병사 2명이 새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돼 일본인들의 거센 분노를 산 바 있음. 이후 주일미군은 모든 병사를 상대로 야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 외출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 후로도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

바. 미·러 관계

- **"오바마, 유럽 MD 관련 리와 타협 원해"〈클린턴〉(11/20, 연합뉴스)**
 - 최근 재선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최대 갈등 현안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 타협책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일 밝힘.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MD와 관련해 러시아와 타협적인 합의안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클린턴 장관이 전했다"고 말함. 라브로프는 이에 덧붙여 러시



아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한에서 미국과 타협안을 찾아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 미국과 나토는 현재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루마니아에 MD 기지, 터키에 MD 운용을 위한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가 나토의 유럽 MD 시스템이 자국 핵전력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제 및 투자 협력 관계 발전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함. 그러나 시리아 사태 해결 전망에 대해 여전히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공통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 중·일 관계

● **중해감선, 센카쿠 영해 또 진입(11/20 연합뉴스)**

- 중국 해감선(해양감시선)들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해에 다시 진입했음.
-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 해감선 편대가 오늘 중국의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정기적인 주권 수호 순찰을 했다"고 밝힘. 일본 교도통신은 해상보안청을 인용, 중국 해감선 4척이 이날 오전 센카쿠 영해에 들어왔다고 전함.
- 이로써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를 단행한 9월 11일 이후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영해 진입 사례는 모두 11차례로 늘어났음. 해감선과 어정선(어업관리선) 등 중국 정부 선박들은 지난달 20일 이후 32일째 센카쿠 열도 영해 또는 인근 해역에 머무르고 있음.

● **중국 해양감시선 댜오위다오內 순찰 지속해(11/21 인민일보)**

- 국가해양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해양감시선 50호, 15호, 26호, 27호로 구성된 편대가 최근 중국의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에서 연례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함. 11월 20일, 중국 해양감시선은 댜오위다오 해역 내에서 순찰을 지속하며 본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일본 측 선박에 대해 증거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엄정하게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주필리핀대사,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설명에 중국 미디어 반론(11/22 산케이신문)**

- 우라베 사토시 주필리핀 대사가 22일, 필리핀의 마닐라 수도권의 호텔에서 강연하며,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를 둘러싼 대립으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에 대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을 호소함. 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에 대해 중국 미디어로부터 반론이 제기됨.



- 우리베씨는, 중국에 도착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전략 파트너"라고 주장함. 단지 센카쿠 제도의 국유화 후에 반일 데모가 빈발해 일본에서 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에 "유감이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염려를 나타내며 "법적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함.
- 중국 미디어로부터 일본의 중국에의 침략 등 역사 인식이 추궁 되었을 때 "우리는, (침략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전후, 평화 국가로서 걸은 일본의 자세도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함.

아. 일·러 관계

● 러·일, 시베리아 개발 협력 합의 (11/21, 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시베리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함.
- 양국 정부는 이날 도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나 무역·투자 확대 문제를 협의하는 '러일 무역 경제 정부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지난해 2월 이후 1년9개월 만임.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이 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환경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작업팀을 설치한다는 데 합의하고 각서에 서명함.
- 양국은 또 사할린 앞바다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이나 의료, 러시아 국내 산업 근대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일본은 러시아가 원하는 시베리아 투자에 응함으로써 양국 간 쿨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양도 교섭의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고 있음.

자. 기 타

● 내년 RCEP·한중일FTA 협상...동아시아 FTA 급물살(종합) (11/19, 연합뉴스)

-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내년에 시작됨.
-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 경제권을 FTA로 묶는 양자, 3자, 다자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게 됐음. 외교통상부는 20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고 19일 밝혔음. 프놈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같은 날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15년 타결을 위해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임. RCEP은 FTA와 유사한 성격이며 참여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아세안의 FTA 파트너 6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임.
- 한·중·일 3국 FTA는 2003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협상에 착수하게 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한중



FTA 협상에 이어 한·중·일 FTA, RCEP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FTA 경제권으로 엮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 시작했으나 2004년 11월 중단한 이후 2010년 국장급에 이어 올해는 과장급 실무협약에서 여건조성 작업을 벌인 바 있음.

- 3국 FTA가 타결되면 201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 기준으로 14조3천억 달러 규모의 통합시장으로 부상하게 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 유럽연합(EU·17조6천억 달러)에 이어 3위 규모임. RCEP이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의 시장을 형성하고 GDP 기준으로 EU를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다.
- 외교부는 "한·중·일 FTA는 RCEP 등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3국 교역은 동아시아의 63%를 차지하는 만큼 포괄적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정치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이날 국회에 보고한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계획을 보면 외교부는 중국, 일본과 관련한 양자, 3자, 다자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양자 FTA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자 결과를 3자(한·중·일) FTA에, 3자 결과를 RCEP에 각각 반영하는 전략을 마련함.
- 외교부는 한·중·일 FTA 협상에 대해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등 모든 분야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되 상품 분야는 양자 간 협상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으로 진행해 공통의 양허안 적용을 추진하되, 상품 양허 협상은 양자와 3자 협상을 병용해 우리 측이 중국과 일본에 서로 다른 상품 양허안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임. 외교부는 RCEP에 대해 상품 자유화 수준을 미리 설정하지 말고 협상을 해가며 정하되, 특별대우는 아세안에 한정하자는 쪽으로 추진방안을 짰음. 중국과 인도의 특별대우에는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RCEP의 협상범위도 상품·서비스·투자에 국한하자는 아세안 입장과 달리 지적재산권과 경쟁 등 규범 분야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협의할 예정임. 외교부는 "RCEP 참여국가와 현재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FTA의 동향, 수준, 범위 등을 고려하며 우리의 특혜 이익이 잠식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함.

● 日 자민, 집단자위권·국방력 증강 공약(종합)(11/21, 연합뉴스)

- 일본의 자민당이 다음 달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국방비를 확충하기로 함.
-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기로 함.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1%인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을 동원한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함.
-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함. 공약에 의하면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함.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국경 주변의 섬을 수호하고 진흥하는 법률과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함.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음.

- 또 영토문제와 관련,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센카쿠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와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함. 지금까지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해마다 2월 22일 실시했던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정부의 행사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함.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등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반론과 반증을 하기로 함. 이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베 총재 등 지도부의 주장을 외교 무대에서 강화하겠다는 뜻임.
 - 교과서 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기로 함. 우익적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핵심 경제 정책으로는 현재 1%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하고, 명목성장률 3%를 달성하기로 함. 이를 위해 일본은행을 통해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함. 내각에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민주당 집권 기간에 상실한 '국민소득 50조엔 탈환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함. 논란을 빚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관세 철폐가 전제될 경우 참가하지 않고, ISD조항(외국투자자 보호 규정)에 반대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함. 원전과 관련해서는 3년 내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음. 이는 탈(脫) 원전을 내세운 민주당과 달리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임.
- 원자바오, 지역정세 및 남중국해에 대한 中입장 밝혀(11/21, 인민일보)
- 20일 오후에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폐막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역 정세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힘.
 - 일부 국가 정상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원 총리는 "황옌다오(黃岩島)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주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의 주권 수호 행위는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함.
 - 원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다. 중국은 대륙국가이자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및 운항의 자유와 안전을 매우 중요시 한다. 현재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운항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국제항로가 세계 경제회복과 발전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힘.



- 또한 "중국은 선린우호 정책을 견지하여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도발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는 10년 전 '남중국해 각국 행위선언'을 체결하고 중요한 원칙과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번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논의를 펼쳤고, '선언'이 더욱 전면적으로 이행되어 공감대를 더욱 형성하고 '준칙'제정 및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힘.
 - 더불어 "중국은 각국들과 함께 어렵게 찾아 온 좋은 협력의 국면을 힘써 지켜나가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임.
- 원자바오, 동아시아정상회의서 "RCEP 적극 지지해"(11/21, 인민일보)
-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기타 참가국 정상들이 참석하였음. 각국 정상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협력과 향후 발전방향 및 관련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회의를 주재함.
 - 원 총리는 발언 중에 "현 국제사회는 주춤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불안정 및 불확실한 요소들의 증가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건의함.
 - 첫째, 협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중국은 '프놈펜 개발 제안(金邊發展倡議)'을 제기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과 협의해 '프놈펜 개발 선언(金邊發展宣言)'을 채택해 '균형, 포용,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각국 간 발전 노하우를 교류하고, 거시정책협조를 강화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금융, 에너지, 교육, 재난관리, 공공보건, 상호연계 등 6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감.
 - 둘째, 지역 단일화 과정의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야 함. 중국은 아세안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추진을 지지하며, RCEP는 역내 국가 간 합의도달을 보여주는 것이자 역내 경제단일화 방향을 명확히 함. 중국은 적극적으로 관련 협상에 동참할 것이며, 각국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정책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저지해야 함.
 - 셋째, 대화, 협상, 윈윈을 통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당사국은 대화를 통해 이견과 문제를 윈윈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함.
 - 넷째, 각국은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해야 함. 중국 경제는 더욱 안정되어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지역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회의에서는 'EAS(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 관련 프놈펜 선언' 등을 채택하였음.



- **중일한 FTA 협상 본격 가동…위안화존 형성 가속화(11/21, 인민일보)**
 -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기간에 중일한 3국 경제무역 대표들이 회담을 갖고 중일한 자유무역지구 협상 가동을 발표하였음.
 -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의 쑹홍(宋泓) 주임은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최근 몇 년 간 시장 수요에 따라 중일한 삼국의 경제무역 교류가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삼국이 각각 아세안과 함께 10+1 무역 지구를 세웠으나 단일 체제 틀 안에서 서의 정식 추진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밝힘.
 - 중국인민대학교 경제대학의 왕진빈(王晋斌) 부학장은 만일 중일한 자유무역지구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아시아에는 사실상 핵심 자유무역지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중일한 자유무역지구 건설 방안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중일한 3국은 경제 구조면에서 매우 좋은 분업 체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70년대 말 이후 중국과 일본, 한국의 투자 관계 및 무역관계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은 일본, 한국으로부터 이전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가공무역 및 제조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첨단 부품 생산업체들 역시 독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음.
 -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 중국과 일본, 한국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한국, 일본은 각각 산업 사슬에서 저, 중, 고점에 위치해 있어 상호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호 투자, 협력의 전망이 밝고 특히 서비스 무역, 신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가 삼국 협력의 중점 영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그 외에 역내 무역과 투자의 단일화가 지역 통화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위안화 역내화 과정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중국국제통화연구센터 쑤화위(孫華玆) 주임은 위안화의 국제화는 주변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위안화 국경 무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중국은 아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중일한 자유무역지구가 가동된 이후에 역내 거래와 투자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이며 위안화가 역내에서 널리 쓰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 중일한 삼국은 각각 2003-2009년과 2010-2012년에 삼국 자유무역지구를 위한 학술연구와 산관학 합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음.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2012년 5월, 중일한 3국 정상들은 베이징에서 합의를 통해 2012년 내에 삼국 자유무역지구 협상을 가동하기로 동의한 것임.